

##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4. 6. 26.(수) 13:00

문의 조영민 인권평화연구원 연구위원 (010-2587-2434)  
김창민 김문수 국회의원실 보좌관 (010-3918-1862)

붙임 간담회 홍보물

## 정치검찰 사건조작의 충격적 민낯 증언 이어져

-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등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개최
- 무소불위 검찰 권력, 사건조작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어
- 22대 국회 검찰 개혁으로 강압수사 · 사건조작 · 정치검찰 뿌리 뽑아야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들이 날날이 폭로됐다.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단장 민형배, 이하 대책단)·인권위원회(위원장 주철현)·법률위원회(위원장 박균택), 시민단체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는 ‘사건조작을 통해 그 누구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22대 국회서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6월 26일 국회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개최됐고, 대책단 제보센터장인 김문수 의원과 인권평화연구원이 주관했다.

검찰의 모해 위증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폭로되고 있음에도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화영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인 백정화씨가 먼저 증언에 나섰다. 백정화씨는 이 前부지사가 과거 작성한 옥중서신을 언급하며, 담당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통해 “김성태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달라고 회유한 사실을 발표했다. 그리고 안

양교도소 이감 이후 작성된 이 前부지사의 옥중서신을 통해 “다음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다.

이 前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 前부지사의 구속 경위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前부지사가 검찰의 별건 기소로 1년 9개월 동안 구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각 사건마다 6개월씩 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 구속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사해 왔고, 이는 불법 체포와 감금을 통해 진술을 조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5만 쪽 분량의 증거가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법정 상황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윤택 변호사는 김용 前민주연구원장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으로 남옥,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이 중형을 받을 상황에서 집중적인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 7월 경부터 구속된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해 가족·지인의 면회가 일체 금지됐고, 남옥의 재산 추징과 유동규의 변호인 접견 제한 등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김 前원장은 사건은 압박, 회유, 형량거래 등을 통한 짜맞추기 수사로 자백조작이 강력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는 ‘정치검찰의 언론탄압 사례’를 발표했다. 뉴스버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수사부 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김 기자는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수사하려던 고발사주 사건과 본 사건의 본질이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이번 수사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성명을 통한 대통령의 사실상 하명수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우성 간첩 사건 역시 검찰의 불법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우성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논란이 됐다. 2014년 중국 당국의 회신으로 출입국기록 위조 사실이 밝혀졌고, 관련 검사들은 내부 징계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이후 유우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다시 기소됐지만,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보복기소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은 ‘2004~2023년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압박으로 24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검찰의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 및 법무부로부터 재소자 관리를 독립시키고, ▲구치소·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즉각 중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간담회는 정치검찰의 뿌리 깊은 사건조작 실태에 대한 역사적 증언의 자리”라며, “증언에 나서주신 피해사례 증언자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민형배 대책단 단장은 “정치검찰 사건조작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체계 정상화를 위해 줄기차게 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주관자인 김문수 제보센터장은 “정적 제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검찰의 사실왜곡과 진술조작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검찰의 불법적 수사와 기소 행태가 드러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 그리고 시민단체 인권연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2대 국회에서의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별첨]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홍보물

더불어  
민주당

#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 간담회

일시 : 2024. 6. 26(수) 오후2시

장소 : 국회 민주당 대표 회의실(본청 205호)

\* 원내대표실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사전행사	10분	개회사/축사 사진촬영	• 참석 국회의원, 인권연대 등
모두발언	2분	행사 개요	• 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15분	검찰수사 자살 피해	• 발제 : 고유기 인권연대 정책실장
사례발표	60분	피해사례	• 사례 1 : 백정화(이화영 前경기도 평화부지사 부인, 대북송금사건 조작) / 김광민 변호사 • 사례 2 : 임윤태 변호사(김용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조작) • 사례 3 :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정치검찰의 언론탄압) • 사례 4 :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서면발표)
	20분	자유토론	• 발제자, 발표자, 참석자
마무리	2분	폐회	• 좌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인권위원회·법률위원회, 인권연대

주관 : 김문수 국회의원(정치검찰 대책단 제보센터장)

더불어  
민주당